

투데이 칼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오는 11월 17일 제78회 순국선열의 날은 일본의 조선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회복을 위해 항거하고 헌신한 독립운동 유공자들 기운에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역사적으로 돌아켜 보면 순국선열의 날은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다른 국가 기념일은 기억하지만 순국선열의 날은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순국선열은 어떤 분들일까. 순국선열을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조의 의사와 열사를 뜻하는 말로, 현재 우리가 추앙하는 순국선열은 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은 일



박윤정
전북서부보훈지원센터장

제의 침략에 맞서 국권을 되찾기 위하여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나라를 잃은 비분과 수치심에 자결하여 순절하신 분, 의병이나 독립군 등으로 활동하시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 그밖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다가 일제에게 체포되어 피살되거나

목사하신 분들 모두를 포함한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속의 번영도 자주독립운동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민족에게 조국광복을 안겨다 준 수많은 애국선열들의 거룩한 순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귀한 공헌과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우리자손들에게 송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또한 선열들의 의로운 기개와 불굴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6.25전쟁의 폐허위에서 나라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지난 시대 순국선열들의 송고한 애국정신을 현재의 우리들을 이룬 근본이었고 시련과 도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자신임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는 11월 17일 제78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송고한 조국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기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자제언

어린이 카시트 착용, 선택 아닌 필수

아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안전용품은 무엇일까? 바로 '카시트'다. 운전을 하다보면 아이를 안고 운전할 때가 있다. 아이가 덩그러니 의자에 앉혀져있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마다 사고가 나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든다. 소중한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카시트는 필수적이다.

2013년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120을 기준으로 영국 96, 독일 95, 프랑스 91, 캐나다 87, 미국 74, 한국 30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안전벨트는 성인 체격을 기준으로 설계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영유아에게 착용시킨다면 사고 발생 시 목조임, 장상상 등 중상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카시트를 착용한 어린이는 이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90% 이상 감소한다. 이는 카시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를 말해준다. 현재 시중에는 연령대와 장착방식에 따라 3가지 카시트가 있다. 0~2세의 영아용 바구니용 카시트, 2~7세 유아용 컨버터블 카시트, 7~12세 아동용 부스터형 카시트가 있다. 자녀의 연령대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영유아(만6세 이하)의 카시트 착용을 도로교통법 50조(특정운전자의 운수사항)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만8세, 미국과 호주는 만9세, 영국은 만12세까지 카시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만6세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카시트를 이용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호관리과장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깜빡이, 깜빡하지 말자

요즘 교통사망사고 관련 언론보도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가 종종기사와 되고 있는데, 졸음운전 못지않게 주변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보복 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 앞으로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 교차로에서 멀리 오는 차가 직진을 할 것 같아 기다리고 있는데 방향지시등 없이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앞에서 정차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가고 지그재그 운전하는 경우, 이미 차로를 바꾼 뒤 방향지시등을 늦게 켜는 경우 등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최근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다른 차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로를 변경할 때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을 두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뒤차가 인식하고 심적 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진로를 변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이 빨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겠다는 생각만으로 방향지시등의 작동 없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이 보

복운전의 발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우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를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 이동 방향을 미리 주변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승용차 기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향지시등은 차량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차량 사이로 진입해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신호 수단 중 하나입니다. 즉, 상대 차량에게 방향을 미리 가르쳐 주어 주변의 차량으로 하여금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들이면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예방하고 가벼운 접촉사고에서부터 대형사고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운전습관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운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의 올바른 작동법을 숙지하여 실천합시다.

배준량 순창경찰서 순화과출소순경

사설

기대한 만큼의 몫 챙기는 힘 길러야

전북도에게 할 몫이 있다. 기대한 만큼의 몫을 챙기는 힘을 길러야겠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 말했던 바,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전북도는 제 몫을 챙김에 있어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앞으로는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뻔하다.

지금 이같은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내년 예산으로 6조4052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 전북도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5816억원이 증가한 액수라며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공감하기엔 좀 부족한 무엇이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증가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른 광역자치체의 비교해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다. 전북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가 생각의 향방을 똑바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도지사과 관계자들은 서운해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 증액을 위해 뛰어다니는 결과,

그만큼 성과를 올렸으면 칭찬을 해줄 법도 하지 않느냐면서 말이다. 물론 그것은 기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래도 도민들에게는 성과를 더 내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우리 지역이 조금은 발전했구나 싶을 때,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 지자체는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북의 경우만 인구가 줄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예산 증액에 대해 자축하기보다는 아쉬웠던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더 강해져야겠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손에 쥐어진 것을 보니 섭섭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와 비교해 581억원이 늘어난 것을 두고 수고했다며 치하하기엔 우리 전북 지역의 낙후가 너무 오래됐다. 다시 말하거나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 몫을 챙기는 역할과 책임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거주 인구도 줄지 않을 터이다. 거듭 당부하건대 전북도는 기대했던 만큼의 몫을 챙기는 힘을 길러야겠다.

논 7000ha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고 있는가?

전북도는 정부의 농업 방침에 민감해야겠다. 저번에도 걱정을 말했거니와 내년부터 쌀 생산 조정제의 시행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을 막고 특정 작목으로 눈을 돌리려는 의도이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북 지역은 논 7000ha를 줄여야 한다. 그것도 2년 동안 그래야 한다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농가들이 그럴 순순히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작물의 과잉생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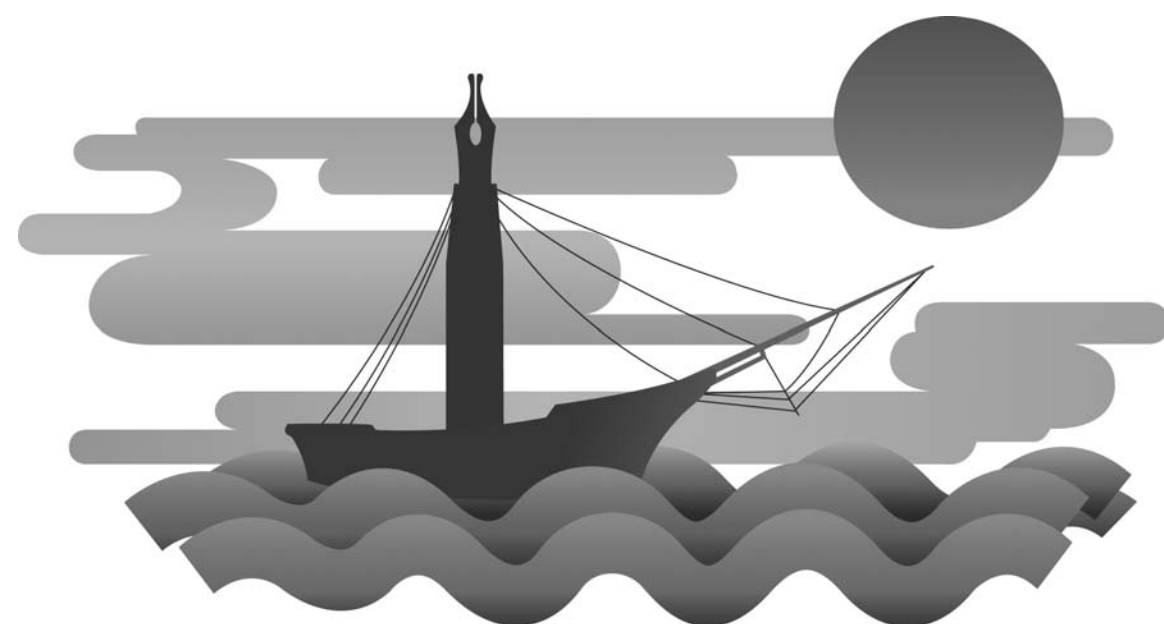
전북도는 도내 농촌의 형편을 잘 살펴야 한다. 농민들은 농촌살이가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농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게 그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을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가 있다. 전북도가 삼락농정의 목표에 올인하겠다고 말한 지도 이제 상당한 세월이 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업인을 위한 그 삼락농정이 효과 적다는 평가이다. 농민들의 냉정한 그 평가에 전북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

전북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농

정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일렀다. 삼락농정 방침이 그 대표적이다. 전북도가 말하는 삼락농정은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 그 목표이다.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데 그게 언제쯤이 될지 지금로서는 막막하다. 삼락농정을 펼친 지 오래인데 농가 소득은 제 자리라는 보도이니 말이다.그러므로 전북도는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삼락농정에 힘을 쏟아야겠다. 도정 최우선 과제로 여러 번 밝혔으니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도는 논 7000ha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로부터 삼락농정에 대해 평가를 받은 전력이 있다해도 농가들은 그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삼락농정의 성공은 도내 농민들이 평가할 일이지 정부의 높은 이들이 판단해줄 일이 아니다. 저번에 농진청이 조사한 바, 팩트가 맞고 있다. 귀농자 중에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 말이다. 삼락농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북도는 더 긴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농가에 실의되는 쪽으로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